

민선 5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평가와 과제

Appraisal and future direction of 5th Daejeon Metropolitan Council

최 호 택

배재대학교

Choi, Ho-taek

Pai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에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로는 주민대표기능(득표율), 의결기능(회기운영, 안전처리), 입법기능(조례안제정, 개정 및 폐지), 견제·감시기능(행정감사, 시정질의, 예산결산안), 기타의정기능(연수, 연찬, 건의·결의문, 주민참여)등의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 서론

한국의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구성되었고,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후 해산되어 30여년간 구성되지 못하다가 민주화의 열망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1991년에 부활하였다.

이후 1995년 6.27 통합선거법에 의해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단체장 등 네 종류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후 네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우리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우리의 지방의회는 한국의 특수한 정당정치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자치입법과 연구활동,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현안이나 민원문제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지역주민의 권익을 신장시켰으며,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활동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시정케하고,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를 진작시키는 등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해 왔다(강인호외, 2002: 5-6; 강상원·이승모, 2009: 140).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의회는 원구성갈등, 해외연수 등과 관련하여 개인의 욕심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존경을 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일체감도 강화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송광태, 2001:45).

나아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 지방의회 의원의 행태적 무능, 지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무능의 온상,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순은, 2001).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라 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의 경우도 그동안 많은 발전

과 성장을 해왔는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반면, 원구성과 관련하여 갈등과 파행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불가능 했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제5기 대전광역시의회의 경우는 원구성과 관련하여 장기간 동안 의정이 마비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건강한 의정활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겨 주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하에서는 지방분권화에 부응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확립할 필요가 있다(이태곤, 2005: 1).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제5기 지방의정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규명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지표의 개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공통적인 지표로는 정량적 지표로서 ①사회·정치적 배경(연령, 학력, 직업, 정당) ②의정활동에 대한 통계자료(의회회기 운영현황, 안전처리-조례, 청원심사, 예결산, 건의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과 정성적 지표로서 ①입법기능-지역주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정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지원정도 ②주민대표기능- 주민대표성발휘정도, 주민이익 반영도,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정도 ③견제 및 감시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지원정도, 예산·결산심의활동, 집행기관 견제할

등의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전자인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에 충실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기능은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의결기능, 집행기관 감시·견제기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Ⅲ. 의정활동의 발전방안

제5기 대전광역시의의회 의정활동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기능강화차원에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민대표기능 강화차원

대전광역시의원들은 지역주민과 동질성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대표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2. 의결(정책) 및 입법기능 강화차원

대전광역시의의회가 정책 및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 개개인이 상임위에서 정확하고 심도있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처의 관련부서와 전문위원들이 의회의 정책보좌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견제·감시기능의 강화차원

견제·감시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전문성과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일 것이다.

4. 의정활동에의 시민참여활성화 측면

지방의회는 지방정책의 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 주민의 결정을 조정하고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논의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과제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정자로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주민의 부재속에 의사결정을 행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방향은 가능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송광태, 2003, 112-15).

첫째, 휴일 및 야간의회개회를 통한 참여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의회활동의 방송중계를 통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의사일정의 고정을 통한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 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유급 시민모니터링제도의 도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섯째, 상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1] 강상원·이승모.(2008). “광역의회 의정활동 특성분석: 서울시의회 (1991-2006)를 중심으로.” 『행정문제는 집』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23(2): 67-98.
- [2] 강인호·오재일·박혜자·민현정(2002). “광역의회의 의정활동평가:광주광역시의의회(1991-2001)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3): 5-20.
- [3] 김순은(200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1991-2001)의 평가와 과제.” 지방자치부활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자료집』, pp.25-45.
- [4] 이태곤(2005).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실적과 주민만족도 평가,”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5] 최호택(2007). “지방의회평가와 활성화방안: 충청권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9:115-134.